

장외로 나선 한국당... 표류하는 정기국회

MBC 사장 체포영장 언론장악 규정...안보 상임위만 참여 김이수 임명동의 또 불발...국정감사·법안심사 줄줄이 차질

정기국회가 예고대로 시작 사흘 만에 파행했다. 제 1야당은 장외로 나설 예정이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장악'으로 규정, 대통령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다만, 전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안보 관련 상임위만 한시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보 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동안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국방위와 정보위는 참석해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금주 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방송 장악 등을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 "안보위가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적법 절차를 부정하고 김장겸 지킴이 노릇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홍준표 대표가 지난 2008년 원내대표 때 당시 정연주 KBS 사장 문제와 관련, '소환장을 두세 번 발송했으면 그 다음에는 절차에 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언론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상기시킨 뒤 "지금 이렇 180도 다르다. (홍 대표가)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예산 및 법안 심사 등 현안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장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가 암묵적으로 합의, 이날 직권상정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불발됐다.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 직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한 표결 참여 여부 및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

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각각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임명동의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국회 합의는 국민과 한 약속인데, 이렇게 뒤집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직권상정은 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한국당은 불참한 채 진행됐다. 국회 차원의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도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은 채 채택됐다.

다만, 한국당이 안보 관련 상임위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사 일정에 전면 참여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며, 오후 예정된 국방위와 정보위가 정상 진행됐다. 오는 5일로 잡힌 외교통상위원회 역시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이수를 어찌하오리까

동성에 처벌 반대·호남출신...국민의당 임명동의 의견 분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4일 또다시 불발되면서 현재 소장 공백이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원 수는 민주당 120명, 한국당 107명이다. 민주당 혼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고 한국당도 역시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캐스팅보트는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동의안에 대해 찬반이 혼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명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해 어떤 표결을 할지 전수조사한 적은 없지만 상당한 반대 의사와 함께 그레도 (동의)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 판결 등에 대해 김 후보자가 과거 군 동성에 처벌에 반대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며칠간 국민의당의

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혼재한다"며 "동성에 처벌 조항에 불합리한 의견을 갖는 데 대해 기독교계에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현실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논의도 있다. 현재 다양성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동성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처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 제기를 옹호하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만큼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다수인 국민의당 내에서 반대파가 많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동성에 논란이 불거지며 김 후보자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러 고민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정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맞나"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호남 구애'

내일부터 5일간 민심 투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10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듣고 지역 현안 사업을 점검한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선 이후 당 지지를 회복을 호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발언했던 안 대표는 5일간의 광주·전남 방문을 통해 국립5·18 민주묘역 등 광주 곳곳을 둘러 볼 계획이다.

안 대표의 이번 광주 방문은 특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해 광주·전남지역 SOC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제기된 '호남 홀대론'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지역 시·도당의 권한 강화'의 밑그림도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달 20일 광주를 찾아 "시·도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당은 정예화 하겠다"며 "17개 시·도당에 '풀뿌리 자치센터'를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풀기 위한 책임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北·美에 특사 파견...투트랙 대화하자"

교섭단체대표 연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일축축발의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 북미-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냉전 시대 유물인 공포의 균형에서 벗어나 공존의 균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며 대화론을 강조했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대북 유화책을 최

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어떤 경우든 전쟁의 참화를 막아야 한다"고 여야의 조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강경 기조로 전환한데 현실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허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추 대표는 또 조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

하다.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배 풀린 지대(地代)'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어 여론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이혜훈 "곧 당 위한 결정 내릴 것"

금품수수 의혹에 사퇴 시사... "결백 믿어달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4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제가 당에 대해 가진 충정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며 사퇴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진실을 명백히 밝혀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조금만 더 말미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한 사업가로부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도 "사실 이 시점에서 당 대표가 아니라면 이번 일과 관련한 보도가 몇십 분의 일로 줄었을 것"이라며 "개인 생각을 하면 한시라도 당 대표에 있을 이유가 없고 유불

리를 따지자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움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당 진로와 정치지형이 민감하고 국가적 중대사가 생긴 복잡한 상태에서 어느 길이 더 나은 것인지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전날 개최한 최고위원회 의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린 이 대표의 거취문제를 논의했고, 참석자 다수는 이 후보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인 만큼 하루 이를 정도 기다려주시는 의견이 많았다"며 "만약 이 대표가 2선 후퇴한다면 아마 비대위위원회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4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T. 062-714-2251